

제153호 (2008. 1. 16)

- 경제 : **2007년 11월** 건설 수주 동향
11월 아파트 거래량 작년 같은 기간의 **50%**
 - 이슈 :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수급 추정
건설 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정책 : **2008년**부터 달라진 건설 관련 주요 제도
 - 경영 :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지원·육성 실태
 - 정보 : 잠재성장률
 - 논단 : 새 정부의 출범과 건설업계의 새로운 각오
-

2007년 11월 건설 수주 동향

- 2007년 11월 건설수주는 공공, 민간부문이 각각 전년 동월비 29.3%, 37.6% 증가하는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월비 34.7% 증가한 14조 1,677억원을 기록함.

2007년 11월 건설수주 동향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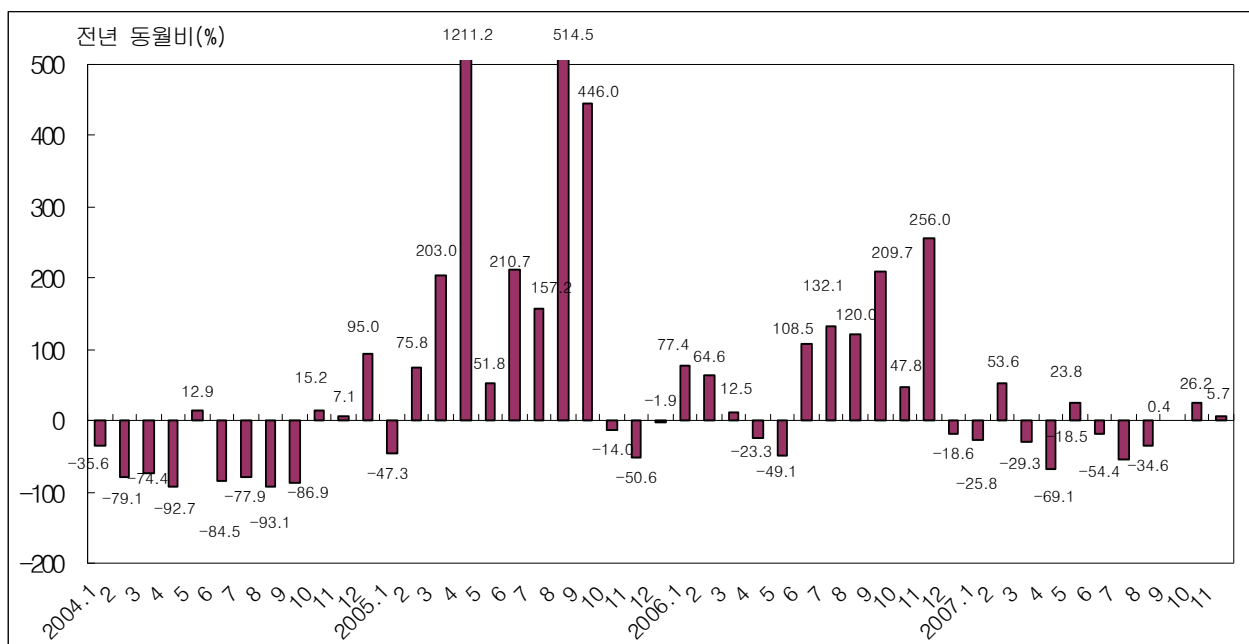
구 분	합계	발주처별						공종별			
		공공	토목	건축	민간	토목	건축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7년 11월	14,167.7	4,762.4	2,317.1	2,445.3	9,405.2	1,801.1	7,604.1	4,118.3	10,049.4	6,477.8	3,571.6
증감률	34.7	29.3	20.7	38.7	37.6	131.6	25.5	52.7	28.5	11.9	75.6
2007년 1~11월	108,790.2	29,845.8	18,073.8	11,772.0	78,944.5	12,176.8	66,767.7	30,250.6	78,539.7	50,699.9	27,839.8
증감률	22.1	24.0	23.1	25.3	21.4	96.5	13.5	44.9	15.1	11.4	22.6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공공부문은 주거용 건축수주가 작년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호조를 이뤄 전년 동월비 29.3% 증가한 4조 7,624억원을 기록함.
 - 공공 토목수주는 연말 발주물량 증가로 전년 동월비 20.7% 증가한 2조 3,17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건축수주는 주거용 건축수주가 작년 기저효과로 감소했으나, 비주거용 건축이 매우 호조를 보인 결과, 전년 동월비 38.7% 증가한 2조 4,453억원을 기록함.
 - 공공 주거용 건축수주는 올 들어 증가추세를 지속했지만 11월 들어서는 전년 동월비 감소하였는데, 수주금액(8,611억원)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었으나 전년 동월 공공주택수주가 매우 높았던 기저효과에 의해 31.9% 감소함.
 - 공공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수주금액이 1조 5,842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매우 호조를 보였는데 특히 전년 수주금액이 낮은 기저효과까지 반영이 되어 217.8%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편, 민간부문은 민자사업 호조에 따라 토목수주 증가세가 확대되고,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주택분양 조기 추진,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주거 및 비주거용 건축수주의 증가세도 지속되어 전년 동월비 37.6% 증가한 9조 4,052억원을 기록함.
 -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가 주택분양을 조기 추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고자 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90.3% 증가하였는데, 금액상으로도 5조 4,448억원을 기록해 10월 수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민자사업의 호조로 전년 동월비 131.6% 증가한 1조 811억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됨.
- 민간 주거용 건축수주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주택분양 조기 추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24.2% 증가한 5조 6,166억원을 기록함.
- 민간 비주거용 건축수주도 경기회복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전년 동월비 29.4% 증가한 1조 9,875억원을 기록함.
- 11월 수주금액이 전년 동월대비 34.7% 증가함으로써 1~11월 동안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비 22.1% 증가해 지난 1~10월의 20.4%보다 증가율이 좀 더 확대됨.
- 11월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지난 10월 일시적 호조를 보였던 재건축 수주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재개발 수주가 전년 기저효과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의 영향으로 18.1%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5.7% 증가함.
- 지난 10월 일시적 호조를 보였던 재건축 수주는 11월 들어 다시 전년 동월비 29.5% 감소한 2,463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올해 계속된 부진을 이어감.
- 재개발 수주는 전년 기저효과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사업 조기추진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18.1% 증가한 1조 1,776억원을 기록함.

재건축재개발 수주 금액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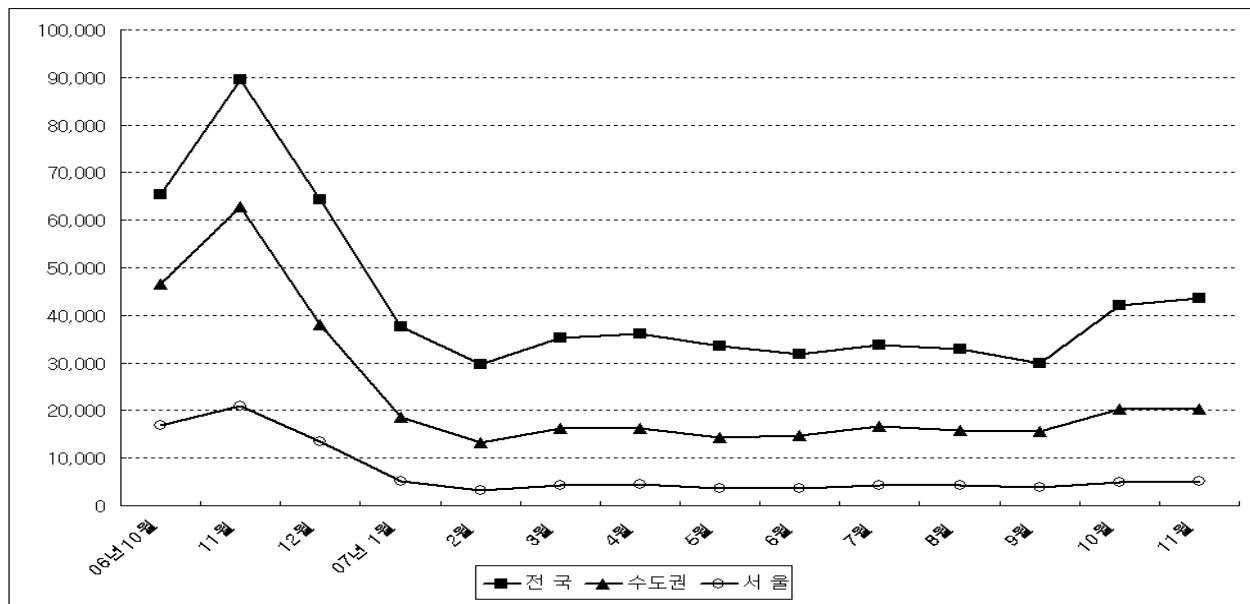
이홍일(연구위원·hilee@cerik.re.kr)

11월 아파트 거래량 직년 같은 기간의 50%

- 2007년 들어 아파트 거래량 급격히 위축, 장기 주택시장 침체 우려 -

- 11월 전국 아파트거래량은 4만 3,674호로 전월 4만 2,137호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간 거래량인 8만 9,458호의 48.8% 수준으로 대폭 감소

월별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



자료 : 건설교통부.

- 거래위축의 배경은 주택을 팔고자 하는 매도자보다 매수자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
 -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규제완화 기대심리 등으로 매도자 및 매수자 모두 관망세 증가
 - 금리인상 등으로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위축

매도/매수세 동향

(단위 : %)

구분	매도세 우위	매수세 우위	비슷함
2006년 연평균	54.3	10.8	34.9
2007년 연평균	57.7	5.5	36.7

자료 : 국민은행.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수급 추정

■ 건설 기능인력 주요 직종별 수요 추정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2012년에 총 1,530천명이 필요하며, 주요 직종별로는 보통인부가 547천명, 그리고 형틀목공이 172천명 필요해짐.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수요 전망 : 2008~2015년

(단위 : 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 천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 투자	125.5	129.3	134.0	132.4	137.9	134.0	134.9	136.9
건설업 취업자	1,957	1,991	2,037	1,984	2,040	1,956	1,942	1,916
건설 기능인력	1,468	1,493	1,528	1,488	1,530	1,467	1,457	1,437
보통인부	524	534	546	532	547	524	520	514
형틀목공	165	167	171	167	172	164	163	161
철근공	80	82	84	82	84	80	80	79
비계공	54	55	56	54	56	54	53	52
철골공	46	46	48	46	48	46	45	45
철판공	45	45	46	45	47	45	44	44
콘크리트공	37	38	39	38	39	37	37	37
조적공	34	35	35	34	35	34	34	33

자료 : 김재영 외(2005), 신도시 개발 등이 전자제 및 건설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건설교통부 참조.

■ 건설 기능인력 주요 직종별 공급 추정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규로 육성되는 숙련인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1,41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15년에는 1,374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공급 추정 : 2008~2015년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성비	격차(2015~07)
건설업 취업자	1,854	1,865	1,867	1,888	1,848	1,809	1,812	1,832	-	-
건설 기능인력	1,391	1,399	1,400	1,416	1,386	1,357	1,359	1,374	100.0	0.0
보통인부	516	529	539	555	554	552	564	581	42.3	6.5
형틀목공	150	148	146	144	139	133	131	130	9.5	-1.8
철근공	73	72	71	71	68	65	64	64	4.6	-0.9
비계공	49	48	47	47	45	43	43	42	3.1	-0.6
철골공	42	41	40	40	39	37	36	36	2.6	-0.5
철판공	41	40	39	39	38	36	36	35	2.6	-0.5
콘크리트공	34	34	33	33	32	30	30	30	2.2	-0.4
조적공	31	31	30	30	29	28	27	27	2.0	-0.4

자료 : 김재영 외(2005), 신도시 개발 등이 전자제 및 건설인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건설교통부 참조.

■ 건설 기능인력 주요 직종별 부족인원 추정

- 2008년에는 부족인원이 7만 7,250명이고, 2013년에는 14만 4,000명까지 증가하며, 2015년에는 6만 3,000명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는 고려되지 않은 것임.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부족 인원 추정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건설업 취업자(부족)	103,000	126,000	170,000	96,000	192,000	147,000	130,000	84,000
건설 기능인력(부족)	77,250	94,500	127,500	72,000	144,000	110,250	97,500	63,000
비숙련인력	10,330	5,959	8,101	-27,942	-8,389	-33,212	-51,011	-79,244
보통인부	8,746	5,045	6,859	-23,658	-7,103	-28,120	-43,189	-67,093
숙련인력	66,920	88,541	119,399	99,942	152,389	143,462	148,511	142,244
형틀목공	14,467	19,274	25,771	22,445	32,869	31,284	32,394	31,251
철근공	7,075	9,426	12,604	10,977	16,075	15,300	15,843	15,284
비계공	4,712	6,277	8,393	7,310	10,705	10,189	10,550	10,178
철골공	4,018	5,352	7,157	6,233	9,128	8,688	8,996	8,678
철판공	3,925	5,229	6,992	6,089	8,917	8,487	8,789	8,479
콘크리트공	3,294	4,388	5,867	5,110	7,483	7,122	7,375	7,115
조적공	2,991	3,985	5,328	4,641	6,796	6,468	6,698	6,461

■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

-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의 변화
 - 불법체류자 및 합법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등이 증가할 경우 본 자료에서 추정된 것에 비해 수급이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대운하 규모 및 추진 시기
 - 기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병행할지 또는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대운하를 추진 할지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초 현재 약 15조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투입 규모와 시기에 따라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됨.

■ 숙련인력 확보 방향

- 직업전망 제시, 고용안정 제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신규 인력의 진입 촉진하고, 지역별로 훈련센터를 설치해 숙련인력으로 육성해야 함. 또한 공고의 건설관련 학과에 현장성 높은 교육을 실시해 숙련인력을 배출함.
- 한편, 산업연수제 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건설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반숙련 외국인근로자를 재도입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건설 관련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현황

- 2008년 1월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은 102개이며, 이 중 건설 관련 부담금은 약 20여개임.
- 건설 관련 부담금 징수 현황은 2002년 2조 3,800억원 규모에서 2006년 3조 5,300억원 규모로 2002년에 비해 40% 증가

■ 문제점

<일부 부담금의 위헌성>

-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5년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의무교육 무상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어, 2007년 대전지법, 부산지법,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제기
- 기반시설부담금은 조세적 성격이 강해 목적세와 중복될 소지가 크며, 지방자치단체별 기반시설 용량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또 징수된 부담금이 기초자치단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는 40%만 배분되어, 부담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중복 부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증가>

- 기반시설 재원 충당 부담금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조세와 동일한 목적으로 지출된다는 측면에서 중복 부과, 즉 ‘이중부담’의 소지가 있음.
- 부담금의 중복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
 - 산지전용의 경우 동일한 대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용예치금,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등이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부과
 -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기반시설 비용의 확보측면에서 중복 부담에 해당

<부과 대상 및 사용의 문제점>

- 대부분의 건설 관련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대상이 개발 주체가 공공인 경우로 한정

하여 경직적으로 운영

- 기반시설의 수요를 유발하지 않고, 민간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경우에도 면제 및 경감 대상에 불포함
- 부담금을 일반재정으로 사용하는 등 부담금 사용이 부담금 원칙에 배치

■ 개선 방안

<위헌적 부담금의 폐지>

-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교육의 원칙과 배치되므로 폐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으로, 장기적으로는 일반 재정의 확충을 통해 해결
- 기반시설부담금 또한 폐지하고 과거 기반시설연동제하의 부담금 제도로 환원

<건설 관련 부담금의 통폐합>

- 건설 관련 부담금을 부과 목적과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통합 및 단순화

건설 관련 부담금 통합 방안(안)

구분(안)	부담금	비고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과밀부담금,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 기반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산림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및분할납부이행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건설환경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담금 사용의 합리적 개선>

- 민간 개발 사업도 기반시설의 설치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총 당 부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필요
- 재정충당 부담금은 징수된 지자체에서 100% 사용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도 60% 이상은 지자체에 배당·사용

강운산(연구위원·wskang@cerik.re.kr)

2008년부터 달라진 건설 관련 주요 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주요한 제도는 아래와 같음.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건설업체들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음. 다만,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는 겸업제한 폐지가 4년간 유예되어 2012년부터 시행됨.
- 의무하도급 폐지
 - 일반건설업자가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제도가 폐지됨.
- 시공참여자체도의 폐지
 - 그동안 제도권내 건설업자로 인정하여 왔던 시공참여자체도가 폐지됨. 동 제도가 부실시공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른 것임.
-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설업자 시공 의무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스키장 등 다중 이용시설물은 도급이든 자체사업이든 구분없이 건설업자만이 시공 가능. 이는 공중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공자격을 강화한 것임.
- 건설업등록·실적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에 위탁 근거 신설
 - ①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확인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및 확인 ② 건설업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와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③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 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 등의 업무는 민간기관인 협회에 위탁
-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기준 조정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5인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 중 선택적으로 처벌. 이는 당초 정부가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일원화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던 것을 업계 의견 등을 감안 완화한 것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

- 공공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이 됨.

■ 국가계약 및 건설기술제도 관련

- 국가계약 및 건설기술 관련 법령 중 2008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다만,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으로 이미 시행중인 사항 중 중요내용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포함하였음.

•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 방법을 공사 특성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다양화

- ① 기존 저가심의기준의 골간을 유지하되 유사 담합 방지와 낙찰률의 다소간 상향을 위해 평가기준 보완 ② 부적정 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③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실시

• 일부 대형공사에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새로운 기술과 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고자 하는 공사는 입찰업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시행

• 턴키·대안입찰공사 대상금액 상향

- 턴키·대안입찰공사 대상금액이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

• 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사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5가지로 다양화

- 종전 턴키·대안입찰공사 낙찰자 결정방법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획일적 방식을 다양화
- ①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②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하는 가격조정 최저가방식 ③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합산한 점수

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는 가중치방식 ④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는 기술조정 최고점수 방식 ⑤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는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방식으로 구분하고 발주기관이 이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결정

• 턴키 입찰방법 심의 및 설계심의제도 개선

- 턴키·대안공사 발주 납발 방지를 위해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보완 시행
-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술위원과 평가위원 입찰업체간 토론 활성화 및 위원별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실명 공개
- 업체와 기술위원 접촉시 위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

• 턴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허용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 전 사이에 (민원, 인·허가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실시설계 적격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 변경시에는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게 됨.

•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게 됨.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발주 특례

-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시행. 이와 함께 지역제한 대상공사도 10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정 시행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폐지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해 대부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 시행함.

백영권(연구위원-ykbaek@cerik.re.kr)

일반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지원·육성 실태

■ 협력업체 지원·육성의 의의

- 향후 일반건설업체의 시공 품질과 원가경쟁력이 시공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협력업체에 의해 좌우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은 우수한 협력업체를 보유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과제가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수 협력업체의 선발(등록 및 지명)뿐 아니라 기 선발된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육성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지원·육성책의 실시는 우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지원·육성책 실태 조사 결과¹⁾ 및 시사점

- 첫째, 일반건설업체와의 거래 현황을 보면, 대다수의 협력업체들이 비교적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하도급 거래의 본래 목적 중의 하나인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취지에는 부합됨.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이 10개사 내외의 일반건설업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으며, 입찰 대비 낙찰률은 30% 이하로 매우 낮고, 주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의존도도 전반적으로 낮아 원도급업체에 대한 충성도(Royalty)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표 1>참조).
 -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전속성(asset specificity)을 높이는 지원육성책의 시행은 협력업체들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에 따르는 피해를 크게 하여 지원육성책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음.²⁾
 - 따라서 지원육성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수정예주의를 통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낮추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본 조사는 2007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소속 600개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누락공종에 대해서는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OO건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 총 144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원도급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기밀적인 생산원가, 새로 개발된 생산기술과 같은 기업 고유의 독점적 정보까지 공유할 경우 이를 경쟁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원치 않는 기업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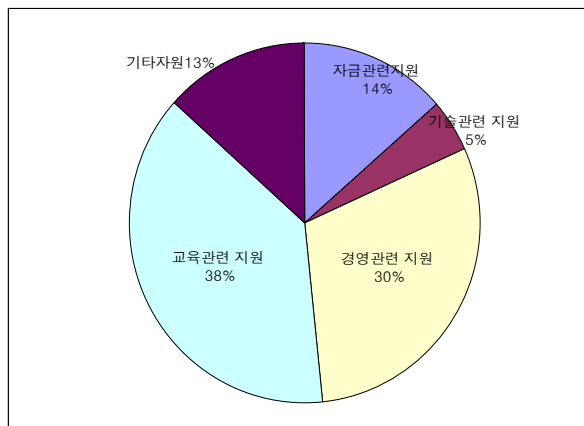
〈표 1〉 연간 입찰 건수 및 공사수행 건수(업체당 평균)

(단위 : 건, %)

구분	전체	부문별				연평균 매출 규모별		
		토목 부문	비노임성 건축부문	노임성 건축부문	설비/ 승강기	100억원 미만	1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연간 업체당 평균 입찰건수(A)	104	111	136	100	57	57	151	176
연간 업체당 평균 공사수행건수(B)	25	13	39	23	16	14	30	53
낙찰성공률(B/A)	24.0	11.7	28.7	23.0	28.1	24.6	19.9	30.1

- 둘째, 지원 유형별로는 교육관련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술관련 지원의 비중이 가장 낮았음.

지원·육성책 유형별 수혜 현황



- 교육관련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뒷받침되는 교육은 지원 효과와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내용이 분명치 않은 교육의 경우에는 효과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술관련 지원의 경우 특히 특허 공법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았으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낮았음.

- 이는 하나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의 경쟁사에도 동시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자사의 특허공법을 공유한 협력업체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에 대한 일반건설업체의 우려를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셋째, 전체 지원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영관련 지원과 자금지원의 경우,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이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역량 제고와는 거리가 먼 지원이 대부분이었음(<표 2>참조).
- 또한, 기업 차원의 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도급 업체간의 공통의 목표 설정이 불가능하고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측정도 어려워 일반건설업체 관점에서 지원을 위한 동기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표 2〉 4가지 유형의 지원책 중 자금 및 자금지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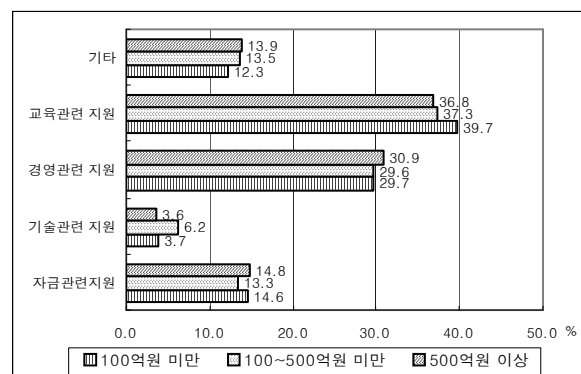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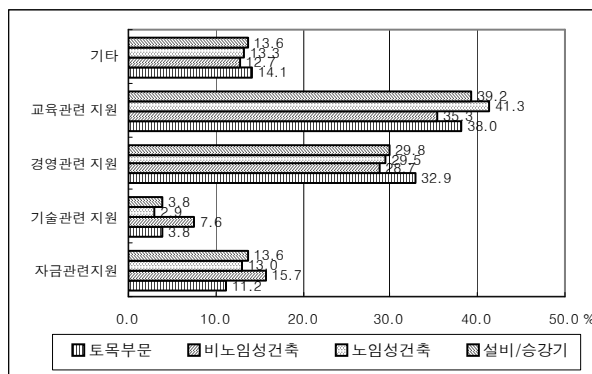
유 형	내 역
자금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협력사 선급금 및 결손금 지원, - 현금성 결제 확대 - 명절 전 특별 기성금 지급, - 긴급자금 필요시 선지급 - 최우수 협력업체 대금 지급기일 단축 - 이익공유제 실시(파트너 플러스제) - 우수업체 대금지급조건 단축, - 주요 공종에 대한 선급금 지원 - 금융권을 통한 협력업체 운전자금 및 공사대금 대출 지원
경영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행보증 감면, -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조달 - 공종별 간담회 개최, - 과투입 발생시 적자 보존 실시 - 우수업체 계약 이행보증 면제 등 입찰 기회 확대 - 수의계약, 특별선택발주 추진 등 입찰기회 확대 - 업무 전자화를 통한 부대비용 절감 지원 (전자보증서 발급, 전자기성실적증명서 발급 등)

- 넷째, 아직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나, 협력업체의 공종별 및 규모별로 실시되는 지원 육성책에 차이가 있었으며, 각각의 지원육성책에 대한 협력업체의 경영 및 생산성 개선효과와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었음.
-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지원의 효과와 만족도도 컸음.
- 지원 유형별로 보면, 자금지원의 경우 현금성 결제의 확대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에 있어서 효과가 높다고 지적되었으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간접 자금지원에 대한 효과가 컸음. 공종별로는 노임성 공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의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기술지원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 지원의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종별로는 노임성 및 비노임성 건축 공종에 있어서 우수 사례 및 하자 사례 등 사례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경영지원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업무 시스템에 대한 지원의 효과가 컸음.

응답업체 부문별 및 규모별 지원육성책 수혜 현황

(부문별 현황)

(규모별 현황)



김민형(연구위원:mhkim@cerik.re.kr)

잠재성장률

-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고, 이 중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는 중에 잠재성장률이 자주 언급되었음.

■ 잠재성장률

- 한 나라의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생산해낼 수 있는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잠재 GDP(potential GDP)라고 하고, 이것의 증가율을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라고 함.
 - 즉,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달할 수 있는 GDP 증가율을 의미함.
-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대의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최대한의(maximum sustainable) 최대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의미함.
- 「최대한」의 의미는 가용한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이며, 「지속 가능한」이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지만, 만약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면 경제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어떤 산출 수준이 지속 가능하느냐의 기준을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활동이 잠재 GDP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물가 상승압력이 발생하고, 생산활동이 잠재 GDP 수준 아래에 있으면 심각한 물가 상승 없이도 추가적인 생산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함.

■ 잠재 GDP의 측정 방법

- 잠재 GDP의 측정 방법은 첫째, GDP의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남은 완만한 추세선을 잠재 GDP로 보는 방법이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경제 전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자본과 노동 등의 요소를 투입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투입 요소의 양과 질을 가늠하고 생산 과정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서 잠재 GDP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음.
- 2002년 12월에 발표한 KDI의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 전망, 2003~2012」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03~2007년에 4.8~5.4%, 2008~2012년에 4.5~5.1%로 예측하고 있음
- LG경제연구소는 2003년 5월에 발표한 「2003~2008년의 중장기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03~2008년에 5.0% 내외로 예측하고 있음.
- 한 나라 경제가 무리없이 추가적으로 생산할 여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잠재 GDP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함.

■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

-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안은 투입 요소인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음.
 - 예를 들어, 해외로부터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되어 잠재 GDP가 증가하고
 - 경제의 자본 스톡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잠재 GDP가 증가하고, 자본스톡이 감소하면 생산성이 낮아져 잠재 GDP가 감소함. 이와 같은 논리는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또 같이 적용됨.
- 또한,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이고, 기술수준을 증가시키는 방안은 연구 개발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안임.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새 정부의 출범과 건설업계의 새로운 각오

우리는 항상 지나간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게 되지만, 이번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맞는 많은 이들의 마음은 예년 어느 때보다 그 설렘과 두려움이 클지도 모르겠다. 국내에서는 경기침체의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맞이한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모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유가 행진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정치 및 경제 전반의 변수들은 대통령선거로 인한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우리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경제 전반을 돌아다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건설시장의 변화는 이러한 경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건설시장은 민간부문에서의 각종 주택 부동산시장 규제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 급증,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내년 사업계획의 수립이 쉽지 않을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는 분명히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원인이 건설업계의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또는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난제들은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건설시장의 위축을 지양하고 미분양 급증 등 지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매제한이나 세제 및 대출규제의 완화여부를 때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이에 상응하여 분명한 변화의 기회로 삼는 능동적 자세가 분명히 요구된다.

새로운 출발의 시점에서 제도 및 시장상황의 변화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해서는 결코 재도약의 시대를 열기는 어렵다.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실업체의 퇴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거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노력이 새로운 나라살림을 맡게 된 차기정부의 땀과 어우러진다면, 과거 선배들의 위기극복 선례들이 결코 전설로만 남아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흥수(원장 직무대행·infra@cerik.re.kr)